

전운 감도는 '윤석열 청문회'...여야 대격돌 예고

여야, 법사위원 교체로 청문회 화력 보강 한국, 윤석열 장모 등 각종 의혹 제기 나서 민주, '땃글사건' 외압 의혹 황교안 정조준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7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여야가 화력 보강 차원에서 청문위원을 교체하며 전열을 가다듬은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 앞서 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기선제압에 나섰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윤 후보자와 악연이 있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할 태세여서 그 어떤 청문회보다 격렬한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4일 한국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5선 중진 정갑윤 의원에서 재선의 김진태 의원으로 교체했다. 검찰 출신의 김 의원은 태극기

부대로부터 전폭적 지지를 얻을 정도로 보수 성향이 강한 인사로 당내에서도 손꼽히는 대(對興) 공격수다.

이에 더해 한국당은 의원직을 상실한 이원영 전 의원의 법사위원 자리에 민주당의 동의를 거쳐 윤 후보자의 검찰 선배인 정정식 의원을 넣으며 화력을 보강했다.

민주당도 검찰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응천 의원 대신 당내 대표적인 '전략봉' 중 한 명이자 달변가로 꼽히는 이철희 의원을 법사위원으로 교체시켰다.

각각 방패와 창을 보강한 여야는 청문회를 앞두고 팽팽한 기싸움에 돌입했다.

공격권을 쥔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측근 친형을 고발하고 장모가 연루된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면서 공세에 시동을 걸었다.

법사위 소속인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친분이 깊은 윤대인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검찰 내부에서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

(小尹)으로 불릴 만큼 친분이 두텁다.

주 의원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윤씨가 해외로 출국했다가 검거됐는데도 대가성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을 두고 윤 후보자가 비호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화력 보강을 위해 법사위에 투입된 김진태 의원은 윤 후보자 장모의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 연루, 영리 목적의 병원 설립 개입, 투자 약정서 위조 등의

의혹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 부인인 김건희 코마나컨텐츠 대표의 재산형성 과정도 살살이 검증하겠다고 버리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가운데 김 대표 명의가 63억9671만원의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황 대표를 정조준 하는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 윤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팀장을 맡았을 당시 법무부장관이 황 대표다.

윤 후보자는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외압 의혹에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황 대표의 외압 의혹을 부각시켜 한국당에 역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촉발된 '동물 국회' 사태와 관련해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문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망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 현재 검찰에 고발된 한국당 의원이 총 58명인데 법사위 소속 한국당 의원을 전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에게 국회선진화법 위반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함으로써 한국당을 압박함과 동시에 한국당 법사위원들의 청문위원 자격을 문제 삼을 예정이다.

한국당 청문위원 전원이 검찰 수사 대상인 만큼 '청문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제17조 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된 검찰 총장 후보자 검증에 나설 수는 없다"며 "수사 대상자가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 수장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도 인사청문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박지원 "北선수단 파견해 광주 세계수영대회 빛내달라"

"부산아시안게임 당시 선수단 파견, 세계 이목 집중"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맞아 앞둔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꼭 (북한의) 선수단 파견으로 이번 광주 대회가 빛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수단 파견으로 남북 관계의 공고함을 세계 만방에 다시 한 번 알릴 기회로 만들어 광주 대회를 성공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남·북·미 정상외 역사적인 판문점 상봉과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아울러 이회호 여사님 서거 때의 조의문과 조화에 거듭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판문점에서 저는 김여정 제1부부장께 오는 12일 광주에서 개막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측 선수단 파견을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며 "김 제1부부장께서는 '위원장님께 꼭 보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동원 국정원장을 특사로 평양에 파견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고 김정일 위원장께서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해 부산 아시안 게임은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고 대성공한 바 있다"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열렬히 환영했고, 헤어질 때는 남북 동포가 함께 울었다"고 회고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일하는 국회법' 기대 속 실효성 의문도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일 안하는 국회' 오명을 벗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월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하는 국회법'은 같은 달 16일 공포된 이후 3개월이 지난 오는 17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일하는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하고 법안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를 놓고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현행 국회법에 의하면 짝수 달(2·4·6·8월)에 임시회를 열게 돼 있는데 국회가 그것도 어기지 않느냐"며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런 법도 어기는 상황에서 일하는 국회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일하는 국회법은 강제적 아닌 훈시규정으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마땅히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게 한계로 꼽힌다.

한 상임위원장은 "훈시규정이라는 이유로 입법가가 훈시규정을 안 지키면 되겠느냐"며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본 소명을 입법에 두고, 자신이 입법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평화당 "조국, 마음 '콩밭' 가 있어...부적절 행동 비난 자초"

조국, '논문표절 의혹' 해명 與 의원들에 보내 논란
"부실한 인사검 대참사...썩 지고 불길 뛰어드는 격"

민주평화당은 7일 차기 법무 장관으로 거론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 글을 다룬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보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난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김재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 전(全) 수석들이 비싼한 각오로 지혜를 모아 대통령을 보좌해도 모자랄 판에 조 수석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 경제가 현 정부 들어 뒷걸음치는 성장률을 보이는 등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며 "실상가상으로 일본이 시작한 무역 보복은 언제 끝날지도 몰라 국민의 시름은 더욱 늘어만 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그동안 조 수석의 본업에서 부실한 인사 검증으로 인사 대참사가 일어나 한국당은 지금도 대통령과의 대척점에 조 수석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 조 수석을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는 것은"이라고 지적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8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